

국경 따로 민족 따로 뒤얽힌 동유럽 개혁

시장경제 실험 실패… 매듭풀기 갈수록 어려워

개혁 이후 동유럽권의 지상파제는 경제체제의 전환이었으나 지난 89년부터 실시된 일련의 선거는 국민의 관심을 경제보다는 정치문제로 몰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짧은 기간 시험해본 경제정책은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정파간의 대립을 불러왔으며 실질소득의 감소는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경제개혁의 범위와 완급에 대한 견해차가 민족분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경 따로, 민족 따로' 강대국의 이해타산에 의해 마음대로 국경이 그어진 채 몇십년이 흐르는 동안 잠복해 있던 민족문제가 숨돌릴 거를도 없이 일시에 터져나온 것이다. 문제의 매듭을 푸는 길은 갈수록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독립' 시위 갈수록 심각

세계 언론이 '벨벳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돼온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간을 이어준 '공동의 적' 공산체제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짧았던 밀월이 끝나고 말았다. 바츨라브 하벨 대통령마저 '연방체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안'을 언급할 정도다.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긴장은 근본적으로는 양민족의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1차대전 이전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의 압제에 신음했으며 체코는 상대적으로 계몽된 오스트리아체제에 편입되었다. 슬로바키아의 '전통적 민족주의'는 헝가리에 대한 저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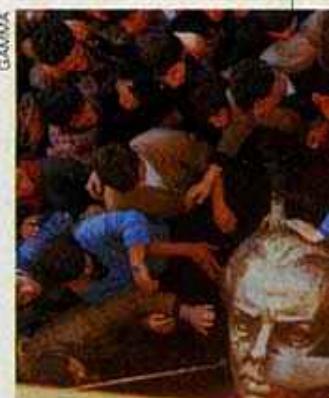
슬로바키아인들을 결정적으로 자극한 것은 공산정권이 슬로바키아에 집중배치한 무기 및 중공업 공장을 위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가격을 자유화한 일이다. 국영기업 매각을 골자로 한 개혁정책은 슬로바키아에서 실업자들을 더 많은 결과로 만들고 이를 대규모 공장을 시설이 낙후된 데다 업종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대다. 이는 체코인의 슬로바키아인 차별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

으로 바키아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그 결과가 빚어낸 사회적 긴장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정치권은 개혁정책의 초기단계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당인 민포럼 대부분에서는 혁신개혁정책을 추구하는 비클라브 클라우스 당총재 겸 재무장관 그룹과 '인간의 가치와 인권'을 내세우는 하벨 대통령 측근의 모임인 '자유클럽'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혁속도가 빨라질수록 슬로바키아 지역이 체코쪽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을 것은



체코: 경제개혁 속도에 대한 민족간의 의견차가 반정부 시위를 가져왔다.



알바니아: 호자 전 서기장의 동

확실하다. 이 때문에 슬로바키아에 기반을 둔 정당들도 연방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메지르 공화국총리는 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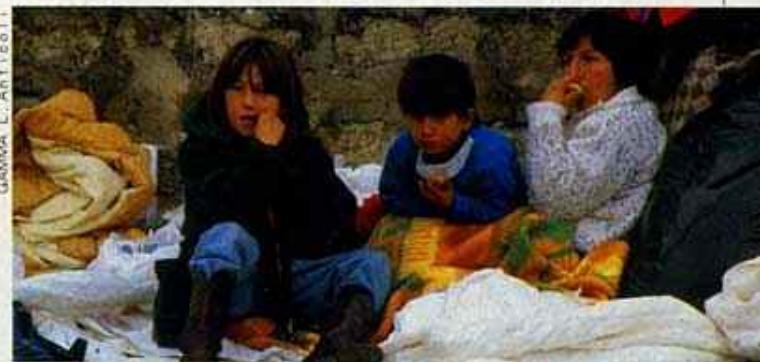
철도·송유관은 슬로바키아에 귀속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슬로바키아 지방선거에서 1위로 발돋움한 기독교민주당의 얀 카르노구르스키 총재도 "때가 오면 연방에서 탈퇴해 유럽공동시장(EC)에 독자적으로 가입할 것" 입장을 천명했다. 최근 여론조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들 대부분이 연방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브라티슬라바에서의 독립요구 시위는 점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권투쟁과 민족갈등 겹친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정국은 집권 구국전선과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의 긴장관계를 한 축으로, 루마니아인과 1백80만의 강력한 헝가리 소수민족과의 민족분규를 또 다른 축으로 해 전개되고 있다. 혁명의 상징인 부쿠레슈티의 대학광장에서는 연일 반정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민당 등 5

'국경' 올타리 속 민족·종교 제각각			
	알바니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인구	3백10만명	2천3백만명	1천5백60만명
1인당 국민소득	8백70달러(89년)	3천5백달러(89년)	7천9백달러(89년)
주민분포	알바니아인 97% 그리스인 유고인	루마니아인 87% 마자르인 8.4% 독일인 2%	체코인 64% 슬로바키아인 31%
종교	67년 無神國 선언	루마니아정교 80%	로마가톨릭 77% 개신교 동방교

* 1인당 국민소득은 미 중앙정보국 추정치



돌아온 난민: 알바니아를 등진 난민 중 1천명이 조국땅에 다시 돌아왔다.